

제 7 주제

사람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논산시 과제와 주요 전략

임 양 빈
건양대학교 교수

사람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논산시 과제와 주요 전략

임 양 빈 | 건양대학교 교수

1. 서론

-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곧 OECD 국가들 수준에 도달할 전망.
-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초과하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2018년에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그리고 2026년에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이는 18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그리고 또 다시 8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이전하는 것으로,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른 속도임.
- 노년 계층은 늘어나고 젊은 계층은 감소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복지수요가 늘어나는 차원을 넘어 경제, 사회, 환경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노동인구의 감소와 소비·투자의 위축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노후소득보장·의료보장·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특히 지방도시에 크게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제도 마련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함. 지방정부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부담이 없지만,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고 노인보건복지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노인복지예산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지방분권화의 진전으로 많은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이며, 대응투자방식이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인구구조 고령화는 지방정부에게도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논산시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된 바 없음.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논산시가 초고령 사회에 도달했을 때,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망하고 이러한 파급효과에 대비하기 위한 논산시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그동안 고령화 문제를 논의할 때는 주로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침.
-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의 차원을 넘어, 사람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 및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 최근 주요 인구사회 및 도시환경 변화가 논산시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다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함.

2. 도시정책 현황과 문제점

2.1 주요 국가의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

1. 글로벌 지역 간 경쟁의 심화

- 지역 간 경쟁시대에서 지역경쟁력의 중요성 증대, 동아시아 대도시권간 경쟁과 기업유치
- 창조도시, 창조산업, 창조계층 등 도시경쟁력 확보위해 새로운 접근방법 대두

2. 저출산, 고령사회의 도래와 도시개발수요 정체 및 감소

-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노령인구비율 증가
 - 2050년 한국의 노령인구비율 37.3%로 예상 (OECD 국가 중 1위)
-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개발수요 정체, 복지지출 증대에 따른 재정여력 축소 등 새로운 과제에 따른 국토 및 지역사회 변화
- 수요 정체시대에서의 도시재생과 사회적 약자층 주택의 공급 확대

3.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요구 증대

- 녹색도시, 패시브오피스 및 패시브하우스(passive office & house), 탈석유 도시의 출현
- 철도 등 궤도교통수단의 부활
- 기능분리 위주의 토지이용계획, 자동차 중심의 도시교통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복합용도 개발, 철도와 역세권 개발 필요성 증대
- 저탄소 녹색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에코시티,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등 새로운 도시, 주택개발 모델로 전환

4. 신재생 에너지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공간계획 체계 도입

- 기후변화와 에너지 시대에 대응한 관련 전문계획과 공간계획의 연계성 향상
 - 모든 공간계획의 분야별 계획에 에너지계획을 필수항목으로 반영하도록 제도화하고 기상분석, 재생가능에너지원 잠재력 분석, 건축물의 단열기준 등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관련 전문계획과 체계적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추진방안 마련

2.2 국내 중소도시의 문제점

1. 도시의 양극화

- 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 구도심과 주변의 신개발 지역, 도시내부 지역 간의 양극화문제는 사회계층별 공간적 격리현상을 야기하여 소득, 문화, 교육 등 생활전반의 차이를 가져왔으며 도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음
- 따라서 생산성, 삶의 질, 관리 및 집행능력 전반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수도권 및 신개발 지역으로의 집중으로의 인해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사회계층별 공간적 격리현상을 가져오고 있으며, 사회계층별 소득, 문화 등의 차이를 가져오고 기존 도시의 도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일으킴

2.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처 미흡

- 무분별한 도시화와 인공 환경의 과도한 건설로 많은 온실가스가 유발되고 있으며, 이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고 해수면의 상승, 적설량의 감소 등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 현재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의무에 대한 법령 등 구속적 규제방안이 전무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 DB 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신도시 개발과 도시화로 인하여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주변지역으로 확산을 통해 많은 온실가스가 유발되며 이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여건이 악화됨

3. 지방중소도시 쇠퇴

- 수도권과 대도시권에 집중되어 중소도시가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중소도시의 쇠퇴는 산업쇠퇴로 인한 지역경쟁력 약화 및 도시의 쇠퇴를 초래함
- 신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으로 인하여 기존 구도심은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감소는 구시가지 기반시설 노후화 및 구도심 침체현상을 더욱 심화시킴
- 신개발 확산에 따라 원 도심 기능의 쇠퇴와 주요 산업 및 중심 상업, 업무기능의 외부 유출로 인한 도심공동화 및 구도심 침체현상 심화가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균형발전특별법, 지역특화지구 조성 등 지방 중소도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쇠퇴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임

4. 지역 정체성의 부재

- 'Scrap and Built'와 같은 물리적 시설 중심의 도시개발정책으로 인해 지방도시의 문화적 특색과 역사성이 사라지고 개성이 없고 획일화된 문화를 양산하고 있음
-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지역발전 전략 또한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만 역점을 두기 때문에 문화를 통한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하며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중앙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시설과 프로그램 중심으로 주체들의 가시적인 지방도시의 문화의 특색과 역사성이 사라지고 있으며 고유문화가 훼손되어 개성이 없고 획일화된 문화로 변화됨
-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발전전략으로 인프라 구축에만 역점을 두기 때문에 문화를 통한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 부족함

5. 고령화사회와 인구감소

- 고령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인프라(adequate infrastructure) 확보는 물론 고령화를 고려한 디자인 요소(design features) 도입과 철저한 계획(sound planning)이 수립되어야 함. 버스정류장, 공원, 산책로 등 공공공간의 안전성과 고령 친화성을 점검하고 보도노면에 대한 관리, 횡단보도 설계와 신호체계, 조명 등 거리환경에 대한 재정비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임.
- 유니버설 디자인은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이 취약성이 높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다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음. 따라서 교통, 주택, 도시설계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6. 주민참여 부족

-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법, 제도 및 사회적 인식의 한계로 주민참여형 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건으로, 주민참여가 형식적이고 제한적이며, 행정편의의 하향식(top-down) 의사결정이 일반적임
- 주민참여의 참여방식이 주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이러한 방식조차 홍보의 부족으로 참여가 저조함
- 또한 초기단계부터 계획의 수립까지 모든 분야에서 주민참여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남

<표 1> 현재 도시문제

주요 문제	내용
도시 양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중소도시-수도권, 구도심-신개발지역 양극화▪ 도시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약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여건 약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방안 미흡
지방중소도시 쇠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도시 쇠퇴로 인한 지역경쟁력 약화▪ 신개발 확산에 따른 도심공동화 및 구도심 침체
지역정체성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도시 문화 특색과 역사성 부재▪ 국내 문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고령화사회와 인구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구조·경제체계의 변화로 인한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지속▪ 인구성자율의 둔화와 감소 및 고령화 사회 도래
주민참여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주민참여▪ 행정편의의 하향식 의사결정(top-down)



<그림 1> 현대 도시문제

3. 시례연구

3.1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 사례

1. 광역권 중심의 도시정책 사례 : 미국 오바마정부의 MetroNation Policy

- 오바마-바이든 정부의 도시정책은 미국 도시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백악관에 도시정책실을 설치하여 미국 광역권에 대한 전략을 개발하고, 도시지역에 연방정부자금을 투입하는 시책을 담당시키고 있음
- 먼저 저·중 소득층 사람 및 거주지에서의 주택공급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연방자금을 지원하는 커뮤니티개발포괄보조금(The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CDBG)을 제도화하였음
- 광역권의 경제적 번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력 훈련 강화,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여성이나 소수인종의 비즈니스 지원, 민관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전국네트워크 형성, 제조업센터를 클린기술지도소로 전환, 교통투자기반의 강화, 숙련 클린기술력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오바마행정부는 광역권 정책을 국가발전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음
- 백악관에 도시정책실(Urban Affairs Office)을 설치하고, 주택 및 도시개발부(Housing & Urban Development Department)의 교통과 주택개발, 상무부(Commerce Department)의 산업발전정책을 대도시권 및 광역권 단위로 통합적으로 추진
- 미국의 국가번영을 위해 생산적 성장, 포괄적 성장, 지속적 성장 등 3대 성장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광역권 단위로 R&D 혁신, 인재 육성, 기반시설 확충, 정부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2. 도시활성화정책 추진 사례 : 일본 정부의 중심시가지 활성화정책 추진

- 기본방향
 - 컴팩트하고 활기찬 시가지 만들기가 목적
 - 고령화 및 인구감소 사회에 대응
 - 향후 지자체의 인프라 유지비용을 고려한 도시구조의 그랜드 디자인 구상
- 시책내용
 - 다양한 도시기능의 시가지 집약을 통한 도시의 컴팩트화 추진
 - 커뮤니티 매력 향상을 통한 중심시가지의 활기 회복.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인구, 보행 통행량, 사업체수, 연간판매액 등의 정량적 지표 도입 강화
 - 환경변화에 대응한 일체적 사업제도의 도입. 중심시가지활성화법과 연계한 특례 지원 등



<그림 2> 고령친화도시의 기본 영역
(WHO 글로벌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

3. 고령사회 대응 도시정책 사례 : 일본 국토청 및 지방정부의 공간이용정책

1) 저출산 고령사회와 공간정책 변화

-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20% 수준이며, 2025년 약 30%, 2050년 약 36%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감소하는 생산연령인구와 연소자인구, 반대로 증가하는 노년인구로 인해 도시의 활력이 저하되고, 특히 다마신도시 등 교외 신도시에서의 활력 저하가 두드러짐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생활스타일을 어떻게 바꾸어나가야 좋은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국토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

2) 인구감소와 광역 생활권역 단위 정책 추진

- 생활권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같은 권역 내에서 통근, 통학지를 필요로 하며, 의료, 쇼핑, 공공서비스 등의 도시적 서비스도 동일한 권역 내에도 받을 수 있도록 도시정책과 공간구조를 형성
- 일본의 인구는 2050년에 약 2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생활권역내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도시적 서비스는 유지할 것을 목표로 설정. 이를 위해서는 개별 도시가 아닌 시정촌이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도시적 서비스를 분담 할 수 있는 지역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
- 도시중심부에서의 거주환경을 충실히 하여 도시기능을 컴팩트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택과 사회간접자본의 갱신주기를 파악하여 도시나 주택의 쇠락을 미리 예방

3)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도입

- 최근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개념을 넘어 보편적 디자인 (universal design) 개념으로 도시, 건축정책의 확장이 이뤄지고 있음
-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개념인 물리적 장벽(높이, 길이, 바닥의 단차 등) 해소를 넘어, 보편적 디자인 (universal design) 개념인 사회적(정보, 심리 등) 장벽이 없는 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도시, 건축정책의 추진을 지향하는 경향도 나타남
- 이와 같은 보편적 디자인 개념에 의한 시책 추진은 아래의 예가 있음

- Universal Design Zone의 설치 : 물리적 거리, 학교에서의 학습,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에서 장애가 없는 공간(zone) 설치하고 이를 인증하는 방식
- 보편적 디자인 행동계획 수립(UD Action Plan) : 도시설계 시 보편적 디자인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지침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및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등에 적용하도록 시책화

4. 저탄소 녹색도시 정책 사례 : 유럽의 녹색도시 개발정책

- 유럽 주요국들은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기 오염을 예방하고, 기존의 녹지 공간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
- 자전거와 대중교통, 그리고 보행을 권장하는 도시 공간을 구성하며, 자연 녹지나 공원의 소설을 막기 위해 개발 지역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선정
- 도시차원의 노력은 세계 최초로 CO₂ 배출 제로도시를 목표로 한 영국의 뉴캐슬과 적극적인 저탄소 정책을 펼치고 있는 영국 런던, 일본 북해도, 포르투갈 알마다, UAE 마스다르 프로젝트와 영국의 베드제드 재개발단지 등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음
- 이 도시들은 탄소저감 관련 통계 DB구축, 탄소저감을 위한 캠페인 전개, 신재생 에너지 사용률 증대 등의 탄소저감 방안과 시민과 기업의 참여유도를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를 실현해 나가고 있음

3.2 도시정책적 시사점

1. 도시정책 과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딘 미국의 경우, 대도시 교외화로 인한 통근거리 확대와 석유중독사회(oil-addicted society) 문제, 유색 소수인종의 도심 집중과 중심시가지의 쇠퇴 현상 문제가 있으나, 대도시 경쟁력 강화와 도시 내 일자리 창출을 국가 도시정책과제로 정의
-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인 일본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국가도시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양극화, 기후온난화와 함께 급격한 고령화사회에 진행에 따른 사회 경제 문제 등을 근본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광역권 중심의 미국 정책 추진

- 국가 잠재성장율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도시(또는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권 중심의 정책을 세우고 추진 중인 미국은 좋은 벤치 마킹 대상임
- 오바마 정부의 광역권 중심의 도시정책(MetroNation Policy) 추진에서 나타나는 대통령 직속 도시정책실 설치, 저·중 소득층 사람 및 거주지에서의 주택공급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자금을 지원하는 커뮤니티개발포괄보조금 (The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CDBG) 등은 한국에도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

3. 도시재생정책으로의 정책 전환

- 택지개발사업과 신도시 개발 중심의 도시개발정책을 20년 이상 해온 우리나라로 구 도시의 쇠퇴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정책으로 정책 전환 시급
- 영국의 이너시티 대책, 미국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 일본의 도시재생정책은 공통적으로 도시내부 활성화 정책을 대표함
- 일본의 도시재생정책은 물리적 개선 중심의 한계를 아직 벗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고이즈미 정권 퇴임 후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의 재생이 강조되는 일종의 균형개발논리와 다시 결합되고 있어서 미래가 불투명함
-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정책은 지방 중소도시의 구 도시의 쇠퇴를 가져와서 도시재생정책 추진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부작용 완화 대책 필요

4. 저출산·초고령화사회에 대한 일본의 정책

- 향후 OECD 최고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우리나라 여건에서 볼 때,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일본의 정책 실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
- 일본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예방’ 아닌 ‘적응’하는 차원인 i) 행정 구역을 초월한 전략적, 광역적 생활권역 단위의 정책 추진(생활권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같은 권역 내에서 통근, 통학지를 필요로 하며, 의료, 쇼핑, 공공서비스 등의 도시적 서비스도 동일한 권역 내에도 받을 수 있도록 도시정책과 공간구조를 형성) ii) 도시중심부에서의 거주환경을 충실히 하여 도시기능을 컴팩트화 하는 정책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단순 ‘적응’ 정도가 아닌 ‘예방’ 차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정책 개발이 필요함.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보편적 디자인 (universal design) 개념의 Universal Design Zone 설치,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보편적 디자인 행동계획 적용 등의 출산 및 보육 친화적 도시, 건축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폐쇄적인 일본이 하지 못하는 외국 이주민을 받아들여 도시를 넓게 유지하는 도시정책도 생각할 수 있음



<그림 3> 기후변화 대응 체계

5. 녹색도시 정책 추진 필요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및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음. 온실가스 감축 목표 30% 설정에 따라 정부는 목표관리제 도입, 건물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가속화할 것이며, 기후변화 대응여건 미흡으로 삶의 질 저하 가능성도 있음
- 온실가스 감축의 방법인 신재생에너지 10% 보급, 산업·수송·건물부문 에너지 효율화, 저탄소 녹색커뮤니티 조성, 탄소흡수원 확충 및 기후적응 녹지 조성 등을 도시정책에서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음

3.3 새로운 도시정책의 종합

1. 세계화·지방화에 따른 도시경쟁시대 도래

- 현대사회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지방정부로 이전되고, 도시 간 무한 경쟁이 본격화되었으며, 교통·정보통신의 발달과 자유교역의 증가로 세계화가 급 속히 진행되어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음
- 세계화, 정보화, 탈산업화, 탈국가화 등의 현상이 급속히 진행됨으로 인해 중앙정부 주 도에서 권한과 책임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탈조정화(Deregularization) 현상이 발생
- 세계화는 인력, 자본, 기술 등의 급격한 이동을 수반함과 동시에 국경을 초월한 도시 간 무한경쟁을 유발하며 교통, 정보통신의 발달과 자유교역의 증가로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
-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소도시에 대한 지배력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2. 기후변화에 의한 녹색성장

- 21세기를 맞이하여 가장 큰 문제는 환경문제로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에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다양한 탄소저감기술을 통한 도시 및 산업 활성화, 지역 활성화가 필요함
-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APEC 정상회담, 최근 일본에서 개최된 G8정상회담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구온난화와 탄소저감 대책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국가, 도시, 기업차원에서 탄소저감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에너지 소비효율의 개선과 청정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 등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3. 중소도시 및 산업단지 활성화

- 기존의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과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에서 탈피하여 노후한 기성시가지내 기반시설의 확충과 주거환경의 개선, 도심부 개발의 합리화, 지역의 균형발전 지원 등을 통한 도시발전과 도심부의 기능회복에 기여함
- 쇠퇴지역의 문제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 해당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노후시가지의 재활성화와 쇠퇴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음

4. 도시의 역사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계획

-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적 변화에 의해 도시문화가 발달하며,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이 확대되고 있음
- 도시의 역사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을 통한 도시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음

5. 고령화사회와 복지도시 지향

-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인구의 노령화와 여성의 사회적 활동으로 인한 육아문제, 장애인 문제 등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인구가 7% 이상이 되는 고령화 사회 진입을 시작으로 2006년 현재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6. 주민참여에 의한 상향식 도시계획 : 커뮤니티 활성화

- 영국의 어반빌리지, 미국의 뉴어바니즘 등의 계획이론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획일적인 도시에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인간적인 도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대부분의 도시개발과정에서 주민은 이해당사자이며 기존의 하향식 도시계획에서 지역의 마을과 도시를 주민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상향식 도시계획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됨

<표 2> 도시정책의 신조류

새로운 패러다임	주요 내용
세계화·지방화에 따른 도시경쟁시대 도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정부로 이양▪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계화가 진행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도시, 기업차원의 탄소저감 노력 필요▪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중소도시 및 산업단지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인 개발을 통한 도시발전과 도심부 기능회복▪ 구도심 및 쇠퇴 산업단지의 재활성화
도시의 역사성과 다양성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문화 발달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 도시의 역사성과 다양성을 존중 및 문화산업 지원
고령화사회와 복지도시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쾌적성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도시정책▪ 고령친화적인 도시환경과 실버인적자원의 활용
주민참여에 의한 상향식 도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도시계획체계로 전환▪ 민·관·기업의 협력체계 구축

4. 사람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논산시 과제와 주요 전략

4.1 사람중심도시의 실천 전략

- 논산시의 문제점과 새로운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살펴봄으로서 다음과 같이 ‘활력’, ‘녹색’, ‘재생’, ‘문화’, ‘복지’, ‘참여’의 여섯 가지 새로운 도시정책 키워드(key word)를 도출할 수 있음



<그림 4> 사람중심도시 실천 전략

4.2 사람중심도시의 기본구상

1. 활력(活力, vit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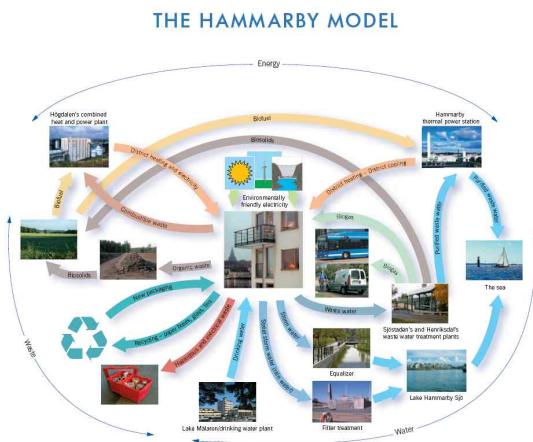
- 도시는 지금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행에 의해 도시경쟁시대로 도약. 교통, 정보통신의 발달과 자유교역의 증가로 인해 세계경제 통합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화로 인해 인력, 자본, 기술 등이 급격히 이동하면서 국경을 초월한 도시 간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
-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도시경쟁 시대에서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의 '활력'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음



<그림 5> 산업도시 도요타

2. 녹색(綠色, green)

-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은 환경문제로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온실가스배출 감축 노력은 최근 국제협약으로 발전되었음
- 대표적인 것이 세계기후회의(1972), 리우환경회의(1992), 교토의정서(2005)에 이어 최근 선진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의무대상이 된다는 발리로드맵(2007), 그리고 2050년까지 1990년의 50%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한 G8정상회의(2008) 등을 들 수 있음
-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을 제시하여 친환경 기술과 청정에너지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기후변화대응 의지를 표명하였음



<그림 6> 스톡홀름 쉐스타드 재생지역
자원순환체계

3. 재생(再生, regeneration)

- 기존의 도시개발은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강조하며 지역 간의 연계성을 갖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었음
- 기존의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과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에서 탈피하여 쇠퇴지역의 문제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7> 일본 시가현 나가하마의 역사적 거리경관 및 유리공예품의 전시 · 판매

4. 문화(文化, culture)

- 그 동안 경제발전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증대되었으며, 이러한 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도시문화전략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는 등 창조적인 문화도시로의 도시정책이 활성화되고 있음



<그림 8> 구마모토 아트플라스 프로젝트를
통한 우수한 도시·건축 창조

5. 복지(福祉, welfare)

- 복지는 지방자치체의 실시와 함께 지역사회복지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는 개인과 가정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는 이러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함
- 또한 사람들이 차별 없이 주거, 교육, 의료, 복지 혜택을 누리고, 범죄와 사고, 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조성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림 9>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안전도시 추구

6. 참여(參與, participation)

- 주민소득증대와 더불어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하향식 도시계획에서 지역의 마을과 도시를 주민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상향식 도시계획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동시에 메가프로젝트 중심의 토건형 도시계획에서 시민의 생활현장과 삶의 문제를 다루는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으로의 개념전환이 필요함
-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면서 지역이 목표로 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과 기업, 지역주민, 지역 전문가 등 각 주체가 협력·교류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적 진행·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그림 10> 도시형 올레길 사업

4.3 사람중심도시의 적용 가능성 검토

1. 친환경자원의 발굴 및 체계화

- 지역의 자연생태자원, 사회적 자원 등을 발굴하여 지역민과 방문객이 함께 중요 자원을 도출하고 평가·관리하는 방안을 통해 지역민의 참여와 방문객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음
- 발굴된 자원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지도화 및 책자화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지역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아이들에게는 교육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
 - 자원의 특성, 위치, 이동방법, 숙박 장소, 맛집 등 지역을 소개하고 방문객이 직접 인터넷 등을 통해 평가함으로서 자원을 별표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 프랑스의 미셸린 가이드, 미국의 자갓 서베이 등은 전문가 또는 일반인들이 평가한 레스토랑 가이드북으로서 논산시의 자원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음

2. 녹색교통과 보행자 네트워크 확보

- 녹색교통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가 아닌 보행과 자전거,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승용차와 연계된 대중교통 및 보행, 자전거를 통한 역사문화자원으로의 편안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논산시의 경우 녹색관광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전거 등의 녹색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린로드’ 설치 등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시속 40km 이하의 초경량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전거,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 건설을 생각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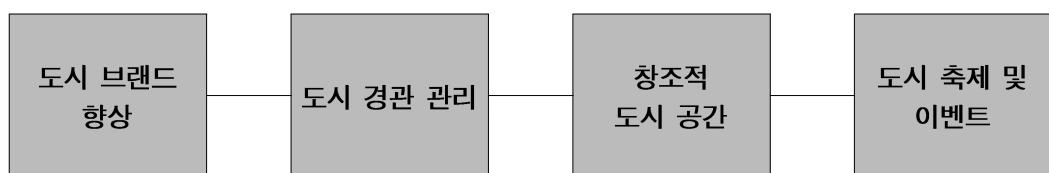


<그림 11> 프랑스 파리 Velib 시스템

3. 도시 이미지 조성과 지역 정체성 확립

- 논산시의 도시 이미지는 도시 브랜드 개발, 도시 경관 관리, 창조적 도시개발, 도시 축제 및 이벤트와 같은 4가지 전략을 통하여 조성 될 수 있음
- Landmark 조성, 지역명소 조성, 도시슬로건 개발 등의 전략은 도시 브랜드를 향상시키는데 효율적이고, 논산시의 지역성이 반영된 도시경관 형성, 특색 있는 주거지 경관의 형성, 가로경관의 형성,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는데 적합한 전략임. 또한 보행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친환경도시 조성 등의 창조적인 도시 공간 전략과 함께 도시 축제 및 이벤트 전략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논산시 도시 이미지 조성 추진 전략



<표 3> 관련 사례 및 논산시 적용 가능성 검토

주요 자원	특징	비고	논산시 적용 가능성
도시 브랜드	영국 글래스고우	▶ 폭력의 도시, 어둠의 도시에서 'Glasgow's Mills Better'라는 이미지전략 캠페인을 통해 유럽의 대표적인 문화도시로 전환	
	일본 가나자와	▶ 문화재 보존조례 등 전통문화의 보전 및 전통산업 활성화 도모 ▶ 일본 전통차 및 특산물 판매 거리 등 역사문화거리 정비	
도시 경관	네덜란드 로테르담	▶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을 통한 문화경관 조성 ▶ 린반거리, 큐브하우스 등 다채로운 도시경관 형성	
	김해시	▶ 도시경관계획을 통해 획일적인 도시경관에서 벗어나 가야역사문화도시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도시경관관리 방안 제시 ▶ 가야의 거리 등 지역정체성을 살린 역사문화거리 조성	
도시 창조적 공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조화 - 오래된 건축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구시가지와 현재의 고층빌딩이 존재하는 신시가지의 조화로운 도시경관 도모	
	일본 구마모토	▶ 아트폴리스 경관 프로젝트의 성공사례 ▶ 1988년부터 1996년까지 50여 프로젝트 완성(주택, 커뮤니티센터, 문화시설, 교량 등) ▶ 지역문화와 전통과 어울리는 창조적 디자인 건축	

4.4 사람중심도시 실현과제 개발: 건강 분야

- 농촌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자원으로서 지역 자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래 정부의 각종 농촌사업에서도 지역활력 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도입
- 농촌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생태자원의 건강성, 전원경관의 아름다움, 문화자원의 개성 등 지역 자원의 특성을 이용한 농촌관광계획이 마을단위에서 먼저 수립
- 최근에는 정주환경, 마을개발 등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도 이의 보전과 활용을 계획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를 주로 마을단위 농촌관광사업과 연계시키고 있으며, 자원 발굴 및 활용계획이 마을단위에 국한되다보니 광역적으로 분포하는 자원에 대한 이용 계획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자원 계획수립의 또 다른 주체가 되어야 하고, 마을단위를 넘어 광역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는 전략이 필요함
 - 아울러 마을관광을 넘어서 환경, 정주, 산업, 문화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자원계획으로 발전해야 하며, 지역단위 자원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자치단체와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지역단위 자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직접 지역자원계획 현장에 적용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함
- 논산시를 대상으로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을 제시
 - 자연생태 및 전통·역사문화자원의 정비·확충으로 농촌관광 기회 확대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녹색관광, 정주권개발, 농촌주거환경개선, 지역특산물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어온 농촌개발사업을 통합적인 사업아이템으로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농촌 종합개발 전략을 모색
- 경제적 파급효과
 - 지역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지역 산업의 창출로 주민소득을 증대
 - 지역경제권이라는 농촌 대안경제 구현과 위기에 봉착한 농촌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지역자원 산업화 효과를 기대

○ 사회문화적 과급효과

- 농촌의 매력 증진으로 도·농 교류 증대 및 사회문화 활성화
- 교육, 문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제고

1. 웰빙존(Well-Being Zone)

(가) 맑은 공기의 자원화

○ 활용 가능한 자원

- 환경자원 - 대기질

○ 기본구상

- 계획권역 내 산림 중 침엽수가 많은 숲 가장자리에서 100m이상 들어 간곳에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구상
- 공기 중 음이온 수가 1cm³ 당 400~1000개 정도가 건강상 좋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음이온이 많이 발생되는 산림, 수변공간 등을 중심으로 음이온 Zone을 구상
- 계획권역 내에 위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자연휴양림 등의 맑은 공기를 순간압축 과정을 거쳐 산소통에 담아 마을 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행사 개최

(나) 생태환경의 자원화

○ 활용 가능한 자원

- 지형자원 - 갯벌, 습지, 바위, 절벽, 봉우리, 소·담, 폭포
- 식물자원 - 마을 숲, 식물군락
- 동물자원 - 천연기념물, 보호·희귀동물, 야생동물
- 자연경관자원 - 산림경관, 식물군락경관, 하천경관, 저수지경관

○ 기본구상

- 생태환경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생태적 현상을 이해하는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
 - 개인이 청정자연지역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생활환경 속에 부족한 자연에 대한 향수를 충족하는 형태
 - 자연생태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자연가이드 등을 양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숲 관찰, 소리로 느끼는 자연, 나무의 고동소리듣기, 철새탐조 등이 가능

2. 테라피(Therapy)

(가) 아로마테라피

- 활용 가능한 자원
 - 환경자원 - 미기후
 - 식물자원 - 마을 숲, 비보숲, 식물군락, 보호수
 - 특산자원 - 특용작물, 친환경농산물
- 기본구상
 - 아로마테라피스트는 방문객과의 상담을 통해 적합한 오일을 권하고 제품의 효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흡입법, 스팀법, 마사지법 등 아로마테라피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하게 됨
 - 친환경 계획권역 내에서는 직접 허브를 기르거나 방향제, 향기 나는 인형, 향초, 허브차 등 아로마를 아이템으로 한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도 가능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아로마 테라피스트를 적극 양성

(나) 워터 테라피(Hydrotherapy)

- 활용 가능한 자원
 - 수자원 - 하천, 저수지, 호수
 - 시설물자원 - 공동생활시설, 공공편의시설
- 기본구상
 - 물에 대한 다양한 효능효과가 발표되고 물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물을 이용한 각종 건강관리법이 각광
 - 물의 압력은 혈관이나 운동신경, 자율신경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고, 수류나 수압 등의 자극이 가해지면 마사지를 받을 때처럼 혈액순환이 증가되는 등 다양한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물을 이용한 테라피에 입욕제로서 아로마를 병행해서 활용하고 입욕 후 허브차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너지를 높임
 - 계획권역 내 공용목욕탕, 족욕시설 등을 계획

(다) 사운드테라피

- 활용 가능한 자원
 - 환경자원 - 소음이 없는 환경, 소리(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등)
 - 수자원 - 하천, 저수지, 호수
 - 지형자원 - 폭포
 - 동물자원 - 천연기념물, 보호·희귀동물, 야생동물
- 기본구상
 - 음악과 소리의 진동을 이용하여 인체를 편안하게 하는 프로그램
 - 자연의 소리, 테라피 용 음악 등을 구비하여 계획권역 내 가장 소음이 없는 장소에서 적절한 조명과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 제공

3. 장기요양

(가) 적극적인 노인(Active Senior)을 겨냥한 장기숙박프로그램

- 활용 가능한 자원
 - 환경자원 - 대기질, 소음이 없는 환경, 소리(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등), 미기후
 - 수자원 - 하천, 저수지, 호수, 약수터
 - 특산자원 - 특용작물, 친환경 농산물 시설물자원 - 공공편익시설
- 기본구상
 - 액티브 시니어들은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펼치고 소비의 주체세력으로 등장하면서 '무기력한 노인'에서 '적극적인 노인'으로 변모
 -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가 되는 2020년대에는 이들의 경제사회적 파워가 증가하고 젊은 세대와 비슷한 소비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적극적 노인층을 대상으로 깨끗한 숙박시설과 한방음식을 제공하고 체조, 태극권, 노인 장수춤 등 건강단련 프로그램을 개발

(나) 만성질환자를 위한 요양프로그램

- 활용 가능한 자원
 - 환경자원 - 대기질, 소음이 없는 환경, 소리(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등), 미기후 - 수자원 - 하천, 저수지, 호수, 약수터

- 특산자원 - 특용작물, 친환경 농산물
- 시설물자원 - 공공편익시설

○ 기본구상

- 당뇨, 고혈압, 관절류마티즘 등 비전염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맑은 공기와 좋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장기요양프로그램을 개발
- 입소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상태 및 욕구수준에 적합한 의학적 치료, 간호, 재활 및 일상 활동 지원서비스, 급식 등을 제공
- 간호사, 요양관리사, 간병 전문 인력 및 전문시설 등이 필요

4. 명상(Meditation) : 명상, 수양, 수련 개념의 프로그램

○ 활용 가능한 자원

- 환경자원 - 대기질, 소음이 없는 환경, 소리(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등), 미기후 - 수자원 - 하천, 저수지, 호수
- 지형자원 - 절벽, 소·담, 폭포
- 자연경관자원 - 산림경관, 식물군락경관, 하천경관, 저수지경관
- 시설물자원 - 공공편익시설

○ 기본 구상

- 건강, 미용, 명상 관련 관광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가족과 함께 레저, 건강, 휴양 기능을 제공하는 복합 프로그램 제공
- 몸과 마음의 휴식과 이를 단련할 수 있는 단기과정 프로그램 운영
- 다도교실, 단전호흡, 요가, 명상수련, 기체조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위한 소규모 테마시설, 성인을 위한 명상, 요가 등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테마공간을 도입

<표 4> 사람중심도시 실현과제 종합

계획요소	시나리오	주요 내용
모듈1 거간 치유	A. 웨비조 (Well-Being Zone)	① 맑은 곳기의 자원화 ② 맑은 물의 자원화 ③ 생태환경의 자원화
	B. 테라피 (Therapy)	① 아로마테라피 ② 워터테라피 ③ 사우드테라피 ④ 컬러테라피
	C. 장기요양	① 액티브 시니어 자기숲박프로그램 ② 만성질환자 요양프로그램
	D. 명상(Meditation)	① 명상프로그램
모듈2 구매 소비	A. 농특사물의 직접 판매	① 농특사물의 산포화 ② 특색있는 농특사물직판장 ③ 어메니티 지원의 특성에 맞는 기념품
	B. 온라인 마켓	① 농사물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마켓 ② 온·오프라인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상품 ③ 인터넷 판매촉진전략 ④ 농기업 경영교육
	C. 농가레스토랑	① 궤역내 농특사물을 이용한 음식 ② 유기농산물을 이용한 웰빙음식
	D. 프랜차이즈	① 외식업 프랜차이즈
모듈3 여유 레저	A. 창작공방	① 혁대공예 창작공방 ② DIY 체험 ③ 원예실습
	B. 예술	① 면수재지 갤러리 ② 유명예술인의 작업실 ③ 예술퍼포먼스
	C. 공연	①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무화예술공연 ② 야외공연장에서의 문화예술공연
	D. 농촌형 스포츠	① 농촌경관사형 스포츠 ② 물을 이용한 스포츠 ③ 사리를 이용한 스포츠 ④ 시설이 필요한 스포츠
모듈4 방문 체험	A. 농업농촌테마파크	① 농특사물형 테마파크 ② 자연체험형 테마파크 ③ 수목원형 테마파크
	B. 농업클러스터 명소화	① 농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명소화
	C. 숙박시설	① 농가숙박 ② 단체숙박 ③ 농가캠핑
모듈5 교육	A. 농촌생활	① 농언체험 ② 전통놀이
	B. 전통예절	① 전통예절
모듈6 디지털	A. 스토리 뱅크	① 스토리뱅크
	B. 오디오 콘텐츠	① 오디오 콘텐츠
	C. 디지털콘텐츠화	① 비쥬얼 콘텐츠